

#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의 중주 이용권 박탈과 압록강 지배 정책

우시키 미키 (히토쓰바시대학)

이번 발표에서는 압록강 유역에 위치한 중주를 둘러싼 식민지 권력의 토지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토지조사사업』과 같은 조선총독부의 토지 정책을, 소유권을 확립시키고 지주 계급의 성장을 촉진하는 근대 개혁으로 평가하는 연구<sup>1)</sup>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총독부의 논에 대한 토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조선인의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소수의 조선인 지주들도 일본인 지주와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실증됨으로써 비판을 받아왔다<sup>2)</sup>.

하지만 총독부의 토지정책이 조선 민중에게 끼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총독부가 증산에 중점을 둔 쌀뿐만 아니라, 조선 민중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른 작물의 생산 방식에도 시야를 넓혀 분석할 필요가 있다<sup>3)</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농민들에게 있어서 쌀 수탈로 인해 궁핍해진 농가 경제의 보전원이었던 갈대밭 육성지인 중주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압록강 하류에는 60여 개의 중주가 존재하였으며, 수백 년 전 홍수에 의해 형성된 뒤, 인근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분할 소유하고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들 중주 중에서도 압록강 하구에 위치했던 황초평, 영문강(1926년 이후 평안북도 용천군)으로 불리는 두 개의 중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 1. 용천군 조선 농민에게 있어서의 중주

용천군의 소작 농민들은 갈대밭 수확물을 이용한 직조업을 부업으로 삼고 있었다<sup>4)</sup>. 총독부는 1920년대 후반 이후 식민지 권력에 의한 농촌 수탈에 기인한 식량 부족과 농가 수입 부족을 보충할 목적으로 가마나나 새끼줄, 명석 생산 등의 농가 부공업을 장려했으며<sup>5)</sup>, 신문 사료를 통해서도 직조업이 그 일환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6)</sup>. 부업의 장려 자체는 식민지 권력에 의한 농촌 수탈을 고정화하는 작용을 했는데, 그러한 부업의 원료마저 빼앗기는 것은 용천군 영세 농민들의 생활이 위협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식민지 정책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연료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갈대밭 수확물은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인 가옥의 난방 설비는 대부분 온돌이었는데, 산 기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연

1) 미야지마 히로시 외, 『조선 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1997. 등

2) 주요 연구로 한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와 장부』, 선인.(조선어) 또 홍창극 「식민지기 조선의 토지개량 사업과 농촌」, 히토쓰바시대학 박사논문, 2020년에도 수리조합 분석을 통해 총독부 정책의 근대성을 부정했다.

3) 산림정책에 대해서도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연구가 크게 진전되었는데, 이상욱은 「식민지 조선의 임야소유권 확정 과정과 묘지 문제」, 『조선사연구회 논문집』 제46호, 2008, 170쪽에서 마찬가지로 "조선산림은 식민지 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근대적 소유권을 부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평북 용천군 신도면 동주동 하천부지 전용 허가의 건-장일북」, 『하천부지 허가 및 불허서류(평안북도)』, 686-687쪽, 1921.12.9, CJA0014823, 한국국가기록원 소장. 이하 같은 형태의 관리번호를 붙인 것은 국가기록원 소장이다.

5) 조선총독부 식산국, 『조선의 농업』, 1930, 135-137쪽.

6) 「의주에서 제로공장 설립 매우 유망한 공업」, 『조선일보』, 1929.7.27.(조선어)

고림 이용 제한이 걸려 있어 연료 재료가 되는 장작이나 나뭇가지, 잎을 자유롭게 채집할 수 없었다<sup>7)</sup>. 그러던 중 1934년에는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조선 일반 빈민들의 어려운 생활이 보도되었고<sup>8)</sup>, 1937년에는 연료가 풍부하기로 알려져 있던 신의주에서도 목재의 군사 이용으로 인해 연료 부족에 빠졌다<sup>9)</sup>. 이러한 압박 속에 조선인들은 장작이나 나뭇가지와 잎 외에 가정용 연료로 시초나 왕겨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갈대밭 경영자가 연료로 판매한 갈대도 이 ‘시초’에 포함되었으며, 가정용 연료원 중 ‘시초’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50%였다.<sup>10)</sup>

## 2. 식민지 권력에 의한 황초평, 영문강을 둘러싼 정책

### 2.1 황초평

일본은 조선 침략에 따라 압록강 중주를 둘러싼 조선·중국 사이의 경쟁에 개입하였고, 중국 측과의 분쟁이 커지는 것을 피하면서 안동과의 무역 발전을 예측하여 황초평을 자국에 귀속시킴으로써 압록강 하구의 수로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청나라 경영의 갈대밭에 대해서는 청나라인의 수확권을 인정하면서 1908년에는 경작자로부터의 징수권을 획득하고, 수세 관행을 바탕으로 황초평의 실질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sup>11)</sup>. 1926년 황초평은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동주동으로 편입되었고<sup>12)</sup>, 이후 황초평의 갈대밭은 평안북도의 직영으로 여겨졌다<sup>13)</sup>. 이때부터 황초평 인접 지역의 간석지 점용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1928년까지 조선인·일본인을 합쳐 5건의 출원이 있었으나 모두 불허되었다<sup>14)</sup>. 이어 1930년부터 1935년까지 모두 10건의 출원이 모두 불허되었다<sup>15)</sup>. 15건의 출원 중 조선인에 의한 것이 11건인데, 출원이 불허된 이유에 대하여 1929년 평안북도지사는 “본 출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출원자에게 점용시켜도 수류나 향로에 지장은 없으나, 해당 토지는 황초평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점용 허가를 보류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불허가 처분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sup>16)</sup>. 그 구체적 내용은 당국이 조선과 중국 농민 간의 중주 이용 분쟁이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발전하거나 항일운동세력이 갈대밭에 잠복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총독부는 일본의 원활한 대외 침략과 압록강 관리통제체제 확립을 위해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회피하고<sup>17)</sup> 조선과 중국 국경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던 항일운동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sup>18)</sup> 것이다. 그런데 1937년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인건 펄프 원료의 대체 자원으로 갈대를 찾아 진출한 가네가후치방적이

7) 최병관, 『일제하조선 임야조사사업과 산림정책』, 푸른역사, 2010, 95-98쪽.(조선어)

8) 「삼림 범죄의 격증」, 『동아일보』, 1934.7.8.(조선어)

9) 「목도 신의주에서 연료 기근 염려」, 『조선일보』, 1937.10.26.(조선어)

10) 평안북도 산림과, 『평안북도 임업통계』, 1936, 35-36쪽.

11) 이주선, 「압록강 중주를 둘러싼 한청전쟁과 제국일본-황초평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역사』, 제763호, 일본역사학회, 2011, 59-67쪽.

12) 오병환, 「19세기 말 20세기 초 압록강 하구 황초평 분쟁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6, 184쪽.(조선어)

13) 동상, 442쪽.

14) 「용천군 신도면 동주동-장대윤 외 1명 불허」, 『하천부지 허가 및 불허 서류(평안북도)』, 188쪽, 1929.3.28, CJA0014824.

15) 동상, 『하천부지 허가 및 불허 서류(평안북도)』

16) 동상, 188쪽, 1929.3.28.

17) 제안동영사→요시자와대신, 「압록강 지나인수선인 금지에 관한 건」, 1932.4.28, JACAR(아시아역사자료센터) Ref.B10074458000, 14번째 이미지, 『1.압록강 수선인관계/분할1』(F-1-7-0-2-6)(외무성 외교사료관)

18) 용천포경찰서, 「만주사변에 있어서의 경찰부대의 비적토벌 개황」, 『공로상에 관한 서류철 만주사변행상(제1차)』, 795-796쪽,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6년, CJA0002463.

황초평 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 경위에 대해 내무국은 “압록강 하구에 있는 아시다의 점용 허가(하천 점용)은 통제상 공공단체인 평안북도에만 허가할 방침이었으나, 가네가후방적은 최근 현저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인건의 소재인 펄프의 원료를 얻을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므로, 산업 지원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허가되어도 괜찮음을 인정한다<sup>19)</sup>”라고 밝혔다. 1929년 이후 가네가후방적이 점용 허가를 받을 때까지 압록강 하구의 중주 전체가 평안북도의 직영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 2.2 영문강

영문강은 1914년에 김자항(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등 12명<sup>20)</sup>이 발견하여 ‘하천 부지 점용’을 청원하자, 당국으로부터 영문강은 중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동정을 상지’한 뒤 출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김자항 등은 지시에 따라 갈대뿌리를 식재하면서 영문강을 자국령이라고 호소해 온 중국인들을 상대로 재판을 벌여 영문강을 ‘조선 영지’로 인정하게 하였다. 후술하듯이 이때의 재판비용은 12명의 연고자 당사자들이 부담했으며 이들은 큰 부채를 졌다. 재판이 수습되자 1916년 10월 김자항 등은 ‘국유 미간지’로 영문강 대부분을 제출하였고, 나아가 당국의 지시로 1,6000엔을 들여 갈대초 재배와 간수인 가옥 건설, 순회선 구입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도의 실사 후 1918년 5월 출원을 ‘관유지 대여원’으로 변경하라는 명을 받자 이를 제출하였으나 대여 통지가 나지 않았고, 1919년 7월 다시 ‘국유 미간지’로 절차를 밟도록 군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변경 신청을 하였다<sup>21)</sup>. 당국의 조사도 8, 9차례 이뤄졌지만 1921년 8월경 ‘논의가 어렵다’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에 출원 결과가 불명확한 상황을 이용하여 영문강의 점유권을 연고자 평안북도 평의원 가토 테쓰지로가 1920년에 ‘하천 부지 점용’을 출원을 했기 때문에 김자항도 즉시 ‘하천 부지 점용’원을 제출하였다. 결국 김자항은 1925년 5월 14일부터 10년간의 기한으로 영문강의 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김자항이 연고자임을 지방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sup>22)</sup>, 원래 경영하던 토지의 1/3은 가토 테쓰지로에게 분배되었다<sup>23)</sup>.

김자항의 점용 기한은 1935년 5월 13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고자 1934년 12월 26일에 다시 점용 허가를 출원하였다. 그러나 군에 제출한 출원서류는 이듬해 5월 초순경까지 상달되지 않아<sup>24)</sup>, 김자항은 점용 연장 허가를 얻지 못한 채 점용 기한을 맞았다. 앞서 기술한 압록강 하구 중주의 도 직영방침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강 점용허가 서류는 1949년 반민특위의 명령으로 철폐된 이각종이 6월에 다시 제출한 출원 서류를 끝으로 기록이 끊겨 있다<sup>25)</sup>.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근거가 되는 ‘조선하천령’은 ‘산미증식계획’이나 하천 개수공사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지만, 일본 본국의 ‘하천령’과 비교해 총독부의 권한이 강력한 데 대해 행정소원이나 행정소송도 인정되지 않았다<sup>26)</sup>.

19)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동주동지 내 압록강 부지 점용의 건(가네가후치방적주식회사)」, 『하천 부지 허가 및 불허 서류(평안북도 충청남도)』, 442쪽, 1937.11.6, CJA0015386.

20) 「용천 미간지 사건」, 『조선일보』, 1923.6.9.(조선어)

21)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동주동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건-김자항 외 6명」, 『하천부지 허가 및 불허 서류(평안북도)』, 837쪽, 1934.1.26, CJA0014823.

22) 전개서, 『조선일보』, 1923.6.9.(조선어)

23) 전개서,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동주동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건-김자항 외 6명」, 868쪽, 872쪽, 1925.5.14.

24) 동상, 934쪽, 1935.8.5.

25) 동상, 1008쪽, 1935.6.18.

26) 히로세 조조, 「식민지 시기의 치수사업과 조선사회-낙동강을 중심으로」, 『조조선사 연구회 논문집』, 제37집, 1999, 125쪽.

### 3. 조선인의 대응

영문강의 연고자인 김자항을 비롯한 조선인 갈대밭 경영자와 인근 주민들은 연고자의 점유권을 청원서를 통해 거듭 호소하였다. 영문강 연고자에 의한 총 6통의 청원서·탄원서 외에 인근 4개 동의 주민 합계 252명이 서명한 '건백서'가 남아 있는데, 이는 김자항 등에 대해 점용 연장 허가를 구하는 것이다. '건백서'에 따르면 용천면 진곶동·신흥동·석성동·중흥동은 십년 이상 경제가 파멸 상태에 있었고, 주민 700여 호 5000여 명은 직단을 부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원료 조달도 쉽지 않았다. 이에 김자항 등이 영문강 부지의 산물인 갈대초를 지역 주민들에게 싼값에 외상 판매하여 '일반 직조자'의 편의를 봐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었으며, 김자항 등이 '불석신명하고 경가투재한 사업지'를 '자기 현직 세력'이 '암중 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sup>27)</sup>.

청원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김자항을 비롯한 영문강의 연고자들은 다이쇼수리조합 평의원을 지내는 등 지역 유력자로서의 경력을 갖고 있었고<sup>28)</sup>, 소작인층이 얼마나 이들 유력자를 지지했는지 여부는 추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영문강의 경영 자료를 통해 이들 조선인 지주 역시 식민지 권력의 압력을 받았고 고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1934년 제출된 영문강의 경영 자료를 보면 1914년부터 1934년까지 약 15,273엔의 적자가 났다. 매년의 수지를 보면 1914년부터 1927년까지 적자, 1928년에는 차감 0엔이었다가 1929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sup>29)</sup>. 적자 부분은, 갈대밭 경영을 위한 초기 투자에 더해 갈대의 번식을 5년 정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sup>30)</sup>, 게다가 첫해에는 중국 측과의 재판 비용 등이 늘어나 예년의 약 2배의 손실이 난 것<sup>31)</sup>이 원인일 것이다. 1934년의 사업계획에서는 10년간 약 4718엔의 수익이 예상되었지만<sup>32)</sup>, 그럼에도 최근 20년간 부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연고자 중 김제걸, 김홍락은 각각 13,000엔, 10,000엔의 부채를 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의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파산당했고, 김계락은 10,000엔의 부채 때문에 금융조합에 의해 마찬가지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파산했으며, 김세걸, 김자항은 각각 10,000엔의 부채를 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경매 유예를 받은 상황이었다<sup>33)</sup>.

### 4. 맺음말

총독부는 기존의 소작 관행을 무시하고 중주를 강권적으로 국유화하였다. 중주의 이용은 연고자나 인근 주민에 대해 표면상의 출원 절차는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국의 이해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것이었으며 일본 본국의 법령에 비해 공정성이 결여되어 식민지적이었다. 압록강 중주 이용 여부는 대중국·대만주 정책으로 규정되어 영토 분쟁 회피와 '치안' 대책 강화라는 목적 아래 연고자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빼앗겼다. 중주나 그 주변의 간석지에 만들어지는 갈대밭은 연고자나 인근 주민들에게는 농가 부공업 원료나 연료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갈대밭 경영자와 인근 주민들은 연고자의 점유권을 호소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조선인 갈대밭 경영자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예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정책이 '근대정책'이 아닌 본국의 이해에 종속된 식민지적

27) 전계서,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동주동 하천부지 점용 허가의 건-김자항 외 6명」, 940-941쪽, 1935.6.30.

28) 「다이쇼수리조합 평의원 개선」, 『조선일보』, 1930.3.8.(조선어)

29) 동상, 876쪽, 1935.5.23.

30) 동상, 865쪽, 1934.12.26.

31) 동상, 876쪽, 1935.5.23.

32) 동상, 866쪽, 1934.12.26.

33) 동상, 884쪽, 1935.7.20.

인 것이며, 이들 정책이 식민지 조선에서 농촌의 곤궁과 조선인 지주의 몰락 역시 야기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갈대밭에 대한 의회의 논의와 지역 유력자, 수리·산림조합 등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용천군 농업에 있어서의 압록강 중주의 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지배 구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에는 조선 각지에 위치한 중주·간석지 중 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의 중주·간석지의 토지 이용 형태와 지배 구조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주·간석지는 하천이나 해안 부근에 많이 위치하고 용천군과 같이 군사 전략과 관련된 경우도 있으며, 논을 둘러싼 수리권, 임업 등 다른 지역 산업과도 관련이 깊다.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 형태가 가지는 지역적 특징을 바탕으로 중주·간석지를 둘러싼 토지 정책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번역책임자:김예진)